지출예산으로 본 역대정부 성격비교

◇ 대통령님께서 지시(1.29) 하신 '지출예산으로 본 역대정부의 성격비교'를 보고 드림

1. 재정의 역할

1 (과거 정부) **단기균형 및 건전성에 중점을 둔 소극적 역할**

○ '70년대 고도성장기를 지나, '80년대부터 단기균형과 건전성에 중점

○ 국가위기 이외에는 재정규모를 GDP대비 **20% 미만 수준에서 운용**

⇒ 위기를 극복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데는 기여했으나,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에는 미흡

* 중앙정부 통합재정 규모(04, %) : 한국('06) 24.6, 스웨덴 37.6, 네델란드 41.0, 프랑스('01) 46.5, 영국('02) 37.7, 미국 21.1

2 (참여정부) **「작은 정부」에서 「책임있는 정부」로 역할을 전환**

○ 교육·의료·주거 등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생활 보장하고, 미래 성장동력 육성 및 안전 등 공공서비스를 확대

○ 복지 및 공공서비스 확대에 따라 **통합재정규모가 확대**

< 통합재정규모 비교 (GDP 대비, %) >

구 분	문민정부('97년)	국민의 정부('02년)	참여정부('06)
통합재정규모 비율	20.4	19.9	24.6

○ 민간자본 활용 등 경제분야 등에 대한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추진

⇒ 복지 확충 및 경제분야 구조조정으로 참여정부들어 재정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이 경제개발을 상회

< 분야별 지출비중 추이 비교 >

(2007.1.29, 지출예산으로 본 역대정부 성격비교, 경제정책비서관실)

(%)

구 분 (비중)	5공화국 ('87)	6공화국 ('92)	문민 정부 ('97)	국민의 정부 ('02)	참여정부			
					'03	'04	'05	'06
▪ 경제	17.7	18.7	24.5	22.6	28.7	23.2	21.0	18.4
▪ 복지	14.3	17.9	17.9	19.9	20.2	24.5	26.7	27.9
▪ 국방	25.5	19.3	13.3	11.6	11.4	11.4	10.3	11.5

* 통합재정규모 결산기준. '06년 통계는 예산기준

2. 복지예산

1 (과거정부) **선성장 후분배의 재정구조로 복지는 시혜적 성격**

○(6 공화국) '80년대 후반 민주화 확산과 3저 호황을 계기로 국민연금 제도 도입 등 복지시책 제도화 추진

○(문민정부) OECD 가입('96)과 함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제도도입을 추진했으나, 실제 복지지출 증가로 연결되는데 한계

○(국민의 정부) 외환위기로 **사회안전망 대폭 확충**

- 복지예산이 대폭 확충되었으나, 기본 패러다임은 '선성장, 후분배'의 종전 틀 유지

*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('00)
* 4대 보험 전국민 확대: 국민연금('99), 고용보험('98), 산재보험('00)

< 통합재정기준 분야별 지출비중 국제비교 >

(%, GDP 대비)

구 분	한 국		미 국	호 주	스웨덴	이태리	벨기에	OECD 평균
	('00)	('06)	('04)	('04)	('03)	('03)	('03)	
경 제 사 업	25.2	18.4	6.5	6.4	9.9	3.9	5.2	9.1
복지및삶의질	22.2	27.9	57.2	52.0	54.1	49.3	59.8	54.7

자료 : IMF,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, 2005.

2 (참여정부) **복지를 사회투자로 재정립하여 새로운 성장전략 제시**

① 사회투자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사회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발휘 →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

(2007.1.29, 지출예산으로 본 역대정부 성격비교, 경제정책비서관실)

② 참여정부 기간중 복지지출은 역대 최고 증가율

○ 국민의 정부에서 구축된 제도적 기반위에서 복지지출을 확대

< 기간별 재정규모 및 복지지출 증가율 비교 (연평균, %) >

국민의정부('97~'02)		참여정부('03~'06)	
재정전체	복지분야	재정전체	복지분야
6.3	8.0	11.3	20.1

* '05년까지 결산기준. '06은 예산기준

< 참여정부 기간('02~'06) 복지 증가율 내역(통합재정기준)>

◇ 참여정부 복지지출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**주택부문과 사회보장성 연금지출** 증가(매년 49% 증가)에 기인

* 국민주택기금 규모 : ('02) 0.4조 → ('06) 6.7조원 (연평균 105% 증가)

* '03년 이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 본격 추진('03~'12) 및 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 등 서민주택자금 융자 확대

◇ 사회보장연금지출 증가는 18% 수준

◇ 주택과 사회보장연금을 제외한 **순수 복지지출 증가율**은 12.8%로 국민의 정부와 비슷한 수준

◇ 사회보장연금 제외 복지지출 증가율은 21.8%로서 역대 최고수준

(조원)

구 분	'97년	'02년	'06년	연평균 증가율(%)	
				국민의정부	참여정부
A. 복지지출 합계	17.8	26.1	54.2	8.0	20.1
B. 사회보장 연금 지출	4.6	11.9	23.0	20.7	18.0
C.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	6.7	2.5	12.2	△17.9	49.0
D. 기타 순수복지 지출	6.5	11.7	19.0	12.7	12.8
(A-B) 사회보장연금 지출 제외시	**13.1**	**14.2**	**31.2**	**1.6**	**21.8**

(2007.1.29, 지출예산으로 본 역대정부 성격비교, 경제정책비서관실)

③ 중점 확충분야 : 사회안전망 확충과 성장잠재력 강화

○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내실화 등 사회안전망 확충

- 기초생활보장 : ('02) 135만명, 3.4조원 → ('07) 167만명, 6.2조원

*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('06.7) : 최저생계비 120 → 130%
*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제도 도입('06)
* 노인요양수발보험 제도 도입 : 시범사업('05~'08) 추진중

구분	6공('92)	문민정부('97)	국민의정부('02)	참여정부('07)
기초생활보장(조원)	0.5	0.9	3.4	6.2
연평균 증가율	8.4%	15.0%	30.1%	13.9%

* 200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은 의료보호+생활보호 예산
* 2001년 이후 기초생계급여지원+의료급여지원 예산, * 연평균 자료 중 6공 자료는 90~92년 연평균 증가율

○ 성장잠재력을 뒷받침하고,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관련 예산 대폭 확충

- 사회서비스 예산증가율은 4.7배 증가
* 사회서비스 : ('02) 2,722억 → ('07) 1조2,945억원 (연평균 36.6% 증가)

- 특히, 여성보육서비스 예산증가율은 5.4배 증가
* 여성보육 서비스 : ('02) 2,461억 → ('07) 1조3,366억원 (연평균 40.5% 증가)

- 고용인프라 구축사업 예산도 지속 확충

구분	6공('92)	문민정부('97)	국민의정부('02)	참여정부('07)
고용관련예산 (조원)	1.3	2.4	5.4	10.4
연평균 증가율	-	13.4%	17.3%	14.0%

3. 경제분야 : 혁신주도형으로 전환 추진

1 (과거정부) 요소 투입에 의존, SOC 확대에 중점을 두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R&D 예산을 지속 확충

○ SOC 투자는 90년대 20%대 이상 증가했으나, 국민의 정부때부터 일반회계 비중 감소

구분	6공('92)	문민정부('97)	국민의정부('02)	참여정부('07)
SOC분야(조원)	3.7	11.2	16.0	18.4
일반회계대비 (연평균증가율)	11.0% (-)	16.8% (24.8)	14.6% (7.4)	11.8% (2.9)

(2007.1.29, 지출예산으로 본 역대정부 성격비교, 경제정책비서관실)

○ R&D 지원 예산도 '90년대 이후 양적으로 대폭 확대

구분	6공('92)	문민정부('97)	국민의정부('02)	참여정부('07)
R&D분야(조원)	1.0	3.0	6.1	9.8
연평균증가율	11.8%	26.6%	16.6%	10.6%

* 총지출 기준

2 (참여정부) **지출구조조정을 통하여 혁신주도형으로 전환**

① 그동안 투자확대로 스톡이 늘어난 SOC는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부문간 우선순위 조정에 중점

- 도로투자는 크게 축소하고 항만과 지역개발 사업을 확대

  * SOC 대비 비중(02→07, %) : 도로 49.2 → 40.9, 항만 8.1 → 11.2

- '05년 임대형 민자사업(BTL) 제도를 신규로 도입 등 재정투자에 민자를 적극 활용

  * 민자 활용 규모(조원) : ('02) 1.2→('05) 2.7→('07) 6.5
  * SOC부문 재정투자대비 민간투자비중(%) : ('02) 6.6→('05) 14.2→('07) 16.5
  * BTL 실집행(조원) : ('05) 0.13 → ('06) 1.5 → ('07) 3.5

②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민간금융 발전을 감안, 외환위기이후 축소하되 혁신형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

- 산업·중소기업 금융지원(조원) : ('02) 3.9 → ('03) 4.5 → ('06) 4.1

- 참여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힘입어 혁신형 중소기업의 두드러진 성장세 시현

  * 혁신형 기업수(개사) : ('02) 9,500 → ('04) 8,839 → ('05) 10,731→ ('06.12) 17,512

③ R&D 분야는 참여정부 기간중 국가기술혁신체계(NIS) 구축 등 투자확대와 더불어 투자 효율성 제고 노력 병행

-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('04.10)으로 R&D예산 조정 기능 강화

  * 부처별 R&D사업의 중복해소, 평가제도 보완 등으로 투자효율성 제고

- 지방대학·중소기업·연구소간 협력연구 활성화로 지방의 기술혁신역량 강화

  * 지방R&D비중(R&D예산 대비, %) : ('03) 27.0 → ('06) 36.2 → ('07) 40.0

(2007.1.29, 지출예산으로 본 역대정부 성격비교, 경제정책비서관실)

4. 국가균형발전의 본격적 추진

① **지방주도, 다극·다원화 국가균형발전 전략을** 재정에서 적극 지원

- 행정중심복합도시, 혁신도시, 기업도시 건설기반 구축
- 지역전략산업 육성, 신활력지역 사업,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(NURI) 등 지역혁신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자생적 발전기반 구축

② **재정분권 추진** : 지방의 사업은 지방 스스로 결정

- 지방교부세율 인상(%) : ('02) 15.0 → ('05) 19.13 → ('06) 19.24
- 지방교육교부세율 인상(%) : ('02) 13.0 → ('05) 19.4
-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('05): '06 예산 5.9조원
- '05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추진 : 163개 사업, 1.1조원 규모

⇒ 이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이전재원 확대

< 중앙과 지방간 재정배분 >

구 분	문민정부('97)	국민의정부('02)	참여정부('06)
○ 지방이전재원(조원)	30.6	46.4	65.3
○ 중앙 : 지방 가용재원(%)	45:55	43:57	41:59

주 : 지방 가용재원 : 지방이전재원(교부세, 보조금, 균형발전특별회계)과 기타 지방세입을 합한 금액

5. 자주국방을 위한 투자 확대

① '80년대부터 국민의 정부 기간까지 축소되어온 **국방비 비중 확대**

(%)

구 분	문민정부('97)	국민의정부('02)	참여정부('07)
○ 국방비(조원)	13.8	16.4	24.5
○ 일반회계대비 비율	20.7	15.0	15.7
○ 기간별 국방비 증가율	10.4	3.5	8.9
○ 기간별 일반회계 증가율	14.8	10.5	7.6

② 자주국방을 위한 '06~'20 기간「**국방개혁 2020**」 **추진**

- 국방병력 중심을 현재 양적 구조에서 첨단 기술군으로 전환
- **2020년까지 병력 18만명 감축** : ('05) 68만 → ('20) 50만명 수준

③ 군내무반 개선 등 **장병 복지부문에도 중점 지원**

- 장병복지예산 : ('03) 1.6조 → ('07) 2.5조원 (연평균 12.0% 증가)
  * 병영생활관을 침상형→ 침대형으로 전환: ('05) 21→ ('06)44 → ('07)51%

참고 1 통합재정규모 및 수지 추이

□ '70~'97년간 통합재정규모 및 수지 추이

(조원, %)

	'70	'75	'80	'85	'90	'95	'97
○ 통합재정규모 (GDP대비)	0.5 (18.8)	2.2 (21.1)	8.5 (22.4)	15.2 (18.7)	34.0 (19.0)	71.6 (17.9)	100.3 (20.4)
○ 통합재정수지 (GDP 대비)	△0.0 (△1.0)	△0.5 (△4.6)	△1.2 (△3.1)	△0.7 (△0.9)	△1.6 (△0.9)	1.2 (0.3)	△7.0 (△1.4)
- 사회보장·공적자금 제외 (GDP 대비)	△0.0 (△1.0)	0.5 (△4.6)	△1.2 (△3.1)	△0.7 (△0.9)	△2.5 (△1.4)	△2.2 (△0.6)	△12.8 (△2.6)
○ 일반회계 적자국채발행	-	-	-	-	-	-	-

□ 외환위기 이후 통합재정규모 및 수지 추이

(조원, %)

	'98	'00	'02	'03	'05	'06 예산	'07예산
○ 통합재정규모 (GDP대비)	115.4 (23.8)	129.3 (22.3)	136.0 (19.9)	164.3 (22.7)	186.4 (23.1)	209.0 (24.6)	209.0 (23.4)
○ 통합재정수지 (GDP 대비)	△18.8 (△3.9)	6.5 (1.1)	22.7 (3.3)	7.6 (1.1)	5.1 (0.6)	0.9 (0.1)	13.4 (1.5)
- 사회보장·공적자금 제외 (GDP 대비)	△24.9 (△5.1)	△6.0 (△1.0)	5.1 0.7	1.0 (0.1)	△6.5 (△0.8)	△14.9 (△1.8)	△13.6 (△1.5)
○ 일반회계 적자국채	9.7	2.0	1.9	3.0	9.0	9.3	8.0

□ 통합재정규모 기간별 평균 증가율

(%)

	'80년대 ('81~90)	문민정부 ('93~'97)	국민의정부 ('98~'02)	참여정부 ('03~'07)
○ 통합재정규모 기간별 평균 증가율	13.0	17.2	6.3	9.3
○ 일반회계 기간별 평균 증가율	16.3	14.8	10.5	7.6

* 통합재정규모 결산기준. '06년 통계는 예산기준

참고 2

복지지출 통계 추이

(조원)

	'97	'02	'03	'05	'06	'07	연평균증가율(%)	
							국민의 정부 ('97～'02)	참여정부 (02~06)
○ 통합재정기준	17.8	26.1	31.7	48.9	54.2	-	8.0	20.1
○ 총지출기준	21.0	37.9	41.7	51.9	56.0	61.4	12.6	10.1 (02~07)
○ 통합재정규모	100.3	136.0	164.3	186.4	208.9	211.7	6.3	9.3 (02~07)

* 총지출 통계는 2004년부터 사용(이전 통계는 추정치). 그러므로 이전 시기와의 비교는 통합재정기준 통계로 비교

* 통합재정은 결산기준('06년 및 '07년은 예산), 총지출은 예산기준

□ 통합재정기준과 총지출 기준의 차이

① 통합재정은「복지 및 삶의 질」로 분류되어 지역사회개발, 환경 등을 포함

- 통합재정 : 보건+복지+주택건설+지역사회개발(환경포함)+오락·문화·종교
- 총지출 기준 : 보건+복지+주택건설

② 통합재정은 순융자(융자지출-융자수입) 개념으로 융자회수금이 많으면 융자지출이 많아도 통합재정규모는 축소

- 통합재정, 총지출 모두 예산과 기금의 지출 + 융자지출 포함

□ 통합재정규모 대비 복지비중과 경제분야 비중 비교

(%)

구 분	'02	'03	'04	'05	'06 (예산)
복 지	19.9	20.2	24.5	26.7	27.9
경 제	22.6	28.7	23.2	21.0	18.4

* 05년까지 결산기준, '06년은 예산